

2018년 5월 19일 교육행정직 사회 (A)형 해설

한수성 사회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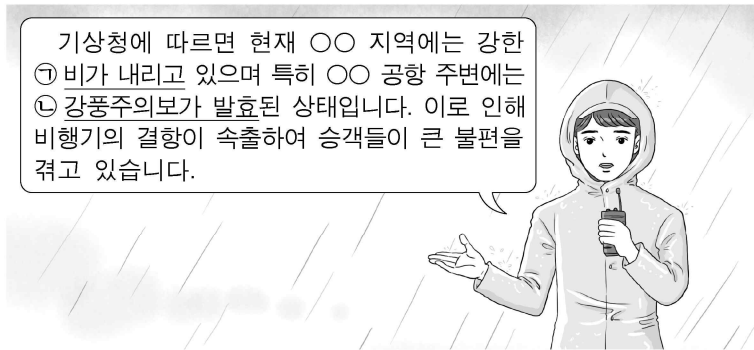
2018 교행직 사회 문제는 사회·문화를 제외하면 대체로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우선 사회·문화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는 분명 반성해야 합니다. 기출에서 너무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면서, 난이도도 까다롭지 않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제는 최근 출제된 여러 직렬의 문제 중 난이도가 가장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 거래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 문제(A형 9번)은 수능에서 간혹 출제되는 문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잘 출제되지 않던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또한 실질 이자율을 묻는 문제(A형 11번)도 수능에서만 간혹 출제되었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보기 드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 실질 GDP 및 실질 GDP 증가율을 구하라는 문제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복잡하여 시간 상 수험생을 괴롭혔으리라 예상됩니다. 법과 정치 또한 기존 공무원 문제보다는 수능형에 가깝게 출제되었으며, 기본 이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려우면서, 제시문까지 길어 시간도 오래 걸렸으리라 예상됩니다.

종합하자면 교육 행정직 사회는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만큼 분명 수능 스타일의 유형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기본 이론의 공부만은 다른 직렬의 수험생과 동일한 학습으로도 충분하지만 수능형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모의고사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8. 5. 19에 교육 행정직을 치루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으며, 제 해설지가 앞으로 교행직을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22일 저녁에 한수성-

1. 밑줄 친 ㉠,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1. [사회·문화 1단원]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비교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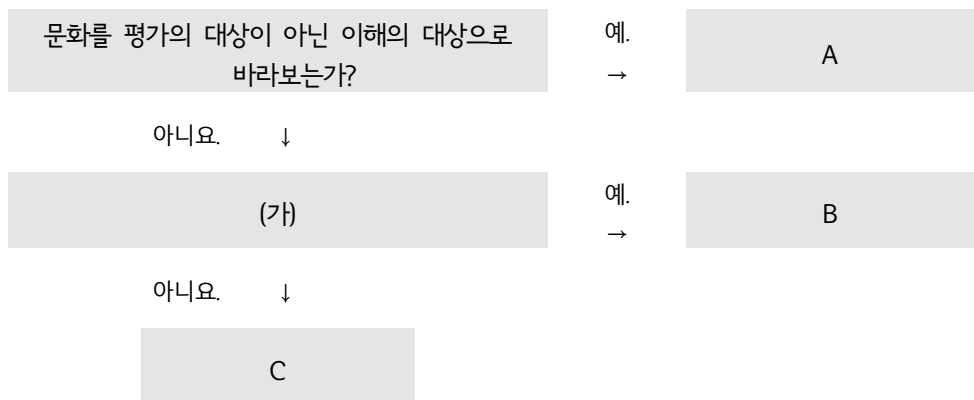
[해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은 자연 현상, ㉡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구분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가치 문제	물가치적	가치 함축적
지배 법칙	존재 법칙	당위 법칙
인과 관계	확실성, 필연성	확률성, 개연성
존재 양상	보편성	보편성과 특수성

- ① (X)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② (O)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합니다.
- ③ (X)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을,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릅니다.
- ④ (X)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그림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중 하나이다.)



- ① A는 B, C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②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는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가?'가 적절하다.
- ③ (가)가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면 C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 ④ (가)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2. [사회·문화 4단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정답] ④

[해설]

우선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A는 문화 상대주의며, B와 C는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는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유형	의미	
문화 절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신의 문화를 가장 우월하다고 믿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문화 사대 주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여 자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	•어떤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보는 태도	

- ① (X)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 절대주의(B, C)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② (X)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따라서 B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 ③ (X)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B에는 문화 사대주의, C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 ④ (O)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B에는 문화 사대주의, C에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는 생물학적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개인은 죽고 구성원은 계속 달라 지지만, 사회는 오랫동안 존속한다. 또한 사회는 강제성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규범을 개인에게 강요한다.

- ① 사회는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② 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 ③ 사회는 개인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진다.
- ④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

3. [사회·문화 2단원]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

[정답] ③

[해설]

사회를 하나의 생명 유기체에 비유하여, 그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라는 하나의 실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회가 생명체라면 개인은 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사회 명목론	사회 실재론
기본 입장	사회는 이름에 불과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
특징	•사회 < 개인 •개개인의 특성은 곧 사회적 특성을 결정함	•사회 > 개인 •사회 구조는 개인들의 삶을 규제하고 결정함
연구 주제	개인들의 특성과 행동 양식 → 미시적 관점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 거시적 관점
관련 이론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회 계약설	전체주의, 사회 유기체설
한계	•지나친 개인주의 우려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개인의 자율성, 주체성, 능동성 등을 설명하지 못함

- ① (X) 사회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 ② (X)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 ③ (O) 사회 실재론에서는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속성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 ④ (X)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 두며, 사회 명목론은 개인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우발적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사람이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사회는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본다. 그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일탈자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①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② 일탈 행동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나타난다.
- ③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
- ④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4. [사회-문화 2단원] 일탈 이론 中- 낙인이론

[정답] ①

[해설]

사회가 자신을 우발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로 인해 자신 스스로가 일탈자로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차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탈의 원인을 사회적 낙인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 ① (O)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낙인)이 후속 일탈 행동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 ② (X)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를 일탈의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 ③ (X)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 ④ (X)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는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가)와 (나)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 (가)는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② (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나)는 (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넓다.

5. [사회·문화 3단원] 사회 보장 제도

[정답] ①

[해설]

(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 (나)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부조입니다.

- ① (O) (가) 사회 보험은 국민 각자가 부담한 보험금을 재원삼아 국가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 ② (X)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가) 사회 보험입니다. 반면 (나) 공공 부조는 국가가 모든 재원을 제공합니다.
- ③ (X)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로, 제시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 ④ (X) 수혜자의 범위는 (가) 사회 보험이 가장 넓습니다.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지만, (나) 공공 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희는 ㉠가족 모두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성실함을 물려받은 영희는 ㉢학교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며 노력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 ① ㉠은 2차 집단이다.
- ② ㉡은 성취 지위이다.
- ③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④ ㉣은 비공식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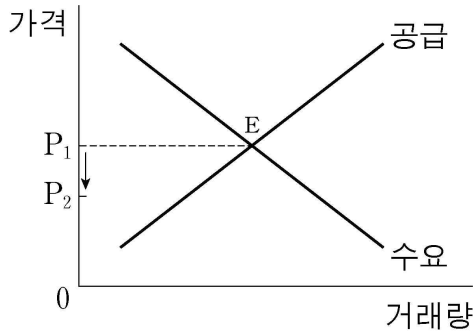
6. [사회문화 2단원] 사회화 기관,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정답] ②

[해설]

- ① (X) 가족은 구성원 간 관계가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1차 집단입니다.
- ② (O)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지위는 후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성취 지위입니다. 참고로 자식의 지위는 선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이므로 귀속 지위가 됩니다.
- ③ (X) 학교는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 ④ (X) 시청은 공식조직입니다. 만약 시청이라는 공식 조직 내부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 결사체를 형성했다면 이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7. 그림은 X재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X재의 가격을 균형가격인 P_1 보다 낮은 P_2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격하한제이다.
- ② X재 생산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 ③ X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 ④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다.

7. [경제 4단원] 가격 통제 정책 中 - 최고 가격제

[정답] ④

[해설]

정부는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현재 균형 가격인 P_1 보다 낮은 P_2 이하로 X재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 중 최고 가격제에 해당합니다.

- ① (X)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가격 상한제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최고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 이하로만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② (X) 최고 가격제는 현재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므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됩니다.
- ③ (X) 최고 가격제 하에서는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 ④ (O)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므로 초과 수요와 같은 시장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타납니다.

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과 (㉡)의 차이를 최대화 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을 고려하면 안 된다.

	㉠	㉡	㉣
①	평균수입	평균비용	암묵적 비용
②	평균수입	평균비용	경제적 비용
③	총수입	총비용	매물 비용
④	총수입	총비용	기회 비용

8. [경제 2단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정답] ③

[해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 총수입)과 (㉡ 총비용)의 차이를 최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을 말하기 때문에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훨씬 커야만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 매물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매물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으므로 선택 시 고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9.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은 7,0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각각 1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하며, 조세의 행정 비용은 없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생산자	최소 요구 금액
갑	10,000원	가	6,000원
을	9,000원	나	7,000원
병	8,000원	다	8,000원

- ① 소비세 부과 전 X재의 거래량은 3개이다.
 ②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다.
 ③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1,000원 이다.
 ④ 소비세 부과로 얻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이다.

9. [경제 3단원] 시장 거래의 성립 조건

[정답] ③

[해설]

(1) 발문 해석: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했다면, 소비세 부과 전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8,000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이 7,000원으로 하락했다면 소비세 부과 전 생산자들이 받은 가격은 8,000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비세 부과 전 균형 거래 가격은 8,000원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부과 후		소비세 부과 전	
소비자 지불 가격	9,000원으로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	8,000원으로 추론
생산자 수취 가격	7,000원으로 하락	생산자 수취 가격	8,000원으로 추론

참고로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의 지불 가격과 생산자의 지불 가격이 다른 이유는 소비세는 공급자가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2)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 성립 조건: 소비자는 가격이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거래합니다. 반면 생산자는 가격이 최소 요구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거래합니다.

- ① (O) 소비세 부과 전 X재 거래 가격은 8,000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지불 가격이 8,000원 이하인 소비자 '갑', '을', '병' 그리고 최소 요구 금액이 8,000원 이상인 생산자 '가', '나', '다'가 모두 거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때 소비자 및 생산자가 모두 1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한다고 했으므로 X재 거래량은 총 3개가 됩니다.
- ② (O) 생산자 잉여는 공급자가 실제 받은 가격에서 최소 요구 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비세 부과 전 X재 가격이 8,000원이므로 '가'에게 2,000원, '나'에게 1,000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총 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 됩니다.
- ③ (X)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비세 부과 전 소비자는 8000원의 금액을 지불하였으므로 '갑'에게 2,000원, '나'에게 1,000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총 3,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한편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는 9,000원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갑'에게 1,000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총 1,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세 부과 후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④ (O) 소비세로 인한 정부의 조세 수입은 = '2,000원 × 거래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9,000원 이하인 '갑'과 '을', 그리고 생산자는 최소 요구 금액이 7,000원 이상인 '나'와 '다'가 거래에 참여하여 총 거래량이 2개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2,000원 × 2개)이 됩니다.

10. 갑과 을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갑과 을의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갑 : 무역흑자의 누적과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을 : 물가의 상승은 국제 유가의 급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① 갑은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② 갑은 재할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③ 을은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④ 을은 국채 매각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10. [경제 4단원] 경제 안정화 정책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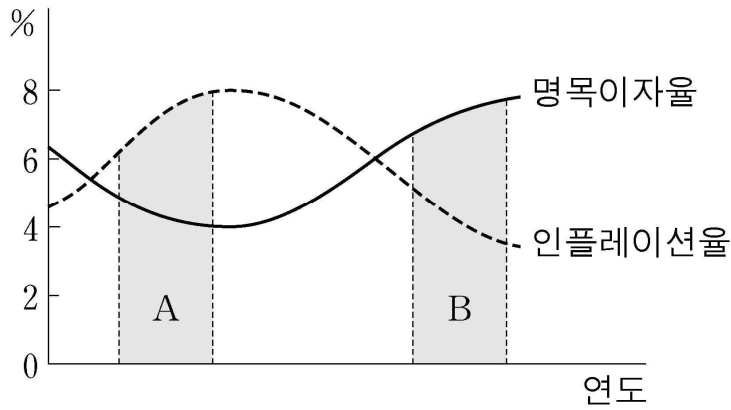
[해설]

갑은 물가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즉 총수요 감소시키는 긴축 재정 정책 또는 긴축 통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을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대책, 즉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 재정 정책 또는 확대 통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① (X) 갑은 소득세율을 인상시키는 긴축 재정 정책(흑자 재정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 ② (O) 갑은 재할인율을 인상시키는 긴축 통화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 ③ (X) 을은 법인세율을 인하시키는 확대 재정 정책(적자 재정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 ④ (X) 을은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대 통화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11. 그림에서 A 구간에 비해 B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① 실질이자율이 낮아질 것이다.
- ②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③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 ④ 가계의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11. [경제 6단원]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정답] ④

[해설]

명목 이자율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
실질 이자율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
	실질 이자율 = 명목 이자율 - 물가 상승률

- ① (X) A구간은 명목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구간이므로 실질 이자율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반면 B 구간은 명목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구간이므로 실질 이자율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A구간에 비해 B 구간에서 더 증가합니다.
- ② (X)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과 같은 실물에 대한 투자보다 예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 ③ (X)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할 것입니다.
- ④ (O)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예금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12. 표는 A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며, 기준 연도는 2010년이다.)

연도	명목 GDP(조원)	GDP 디플레이터
2012	1,260	105
2014	1,650	110

- ① 10% ② 15% ③ 20% ④ 25%

12. [경제 4단원] 실질 GDP와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정답] ④

[해설]

GDP 디플레이터 공식은 대부분 숙지하고 있을 것이며 문제에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GDP 디플레이터 공식을 활용하여 실질 GDP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bullet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bullet \text{실질 GDP} = \frac{\text{명목 GDP}}{\text{GDP 디플레이터}} \times 100$$

$$\bullet \text{실질 GDP 증가율(\%)} = \frac{2014\text{년 실질 GDP} - 2012\text{년 실질 GDP}}{2012\text{년 실질 GDP}} \times 100$$

2012년의 실질 GDP는 $\frac{1,260}{105} \times 100 = 1,200$ (조원), 2014년의 실질 GDP는 $\frac{1650}{110} \times 100 = 1,500$ (조원)입니다.

결국 실질 GDP 증가율(\%)은 $\frac{1500 - 1200}{1200} \times 100 = 25$ (%)가 됩니다.

→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저도 이거 계산해야 되나(?) 하고 살짝 막막했습니다. 수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하는 수험생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교행식처럼 수능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보기와는 다르게 계산이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의외로 약분이 잘되어 생각보다는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촉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당 문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계산이 쉽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시험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 국제 사회 행위 주체 (가)~(다)의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기구
 (나) 국제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다)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

	(가)	(나)	(다)
①	국제 엠네스티	그린피스	국제 연합
②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 무역 기구	국제 연합
③	그린피스	국제 연합	프랑스
④	세계 무역 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캐나다

13. [법과 정치 6단원]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정답] ③

[해설]

(가)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비정부 국제 기구(INGO)로 국제 엠네스티, 국제 사면 이사회,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부 간 국제기구(IGO)로 국제 연합(UN), 유럽 연합(EU), 세계 무역 기구(WTO)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는 주권을 갖는 독립적 행위 주체인 국가를 의미합니다.

1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다. 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 을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 내 최대 다수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각각 갖고 있다.

- ① 갑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 ②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 ③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가깝다.
- ④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하다.

14. [법과 정치 2단원] 다양한 정부 형태

[정답] ④

[해설]

갑국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혼합형 정부형태를, 을국은 대통령은 선출하지만 단지 명목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의회에서 배출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고 운영하므로 의원 내각제 중심의 정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무리하게 정부 형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지문을 분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죠. 교행직을 대비한다면 이처럼 주어진 자료를 넓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능식 훈련도 필요합니다.

- ① (X)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갑국에서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② (X) 갑국의 정부형태에서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 및 의회 해산권 등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 ③ (X)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보다 의원 내각에 가깝습니다.
- ④ (O) 을국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갑국에서는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하게 타나납니다.

15. 갑국의 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 의회의 정원은 100명이다. 이 중 50명은 인구와 산업 등의 기준으로 획정한 50개의 지역구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즉 갑국 유권자는 1인당 2표를 행사하는데, 1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나머지 1표는 전국 단위 선거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구 평균 면적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작지만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약 3배 많다.

- ① 지역구 선거에서 표의 증가성이 보장되고 있다.
- ②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지역구 선거보다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
- ④ 전국 단위 정당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획득 정당 수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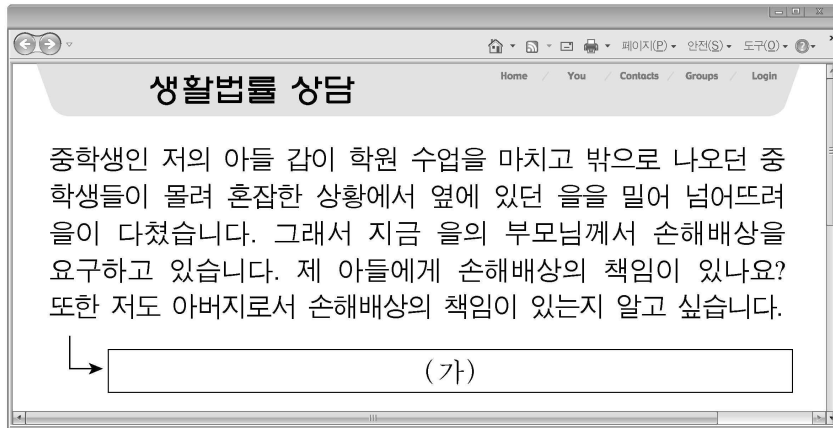
15. [법과 정치 2단원]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거

[정답] ②

[해설]

- ① (X) 지역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선거구 평균 면적은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작지만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약 3배 많다고 했습니다. 즉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약 3배정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의 증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표의 증가성이란 선거구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의 증가성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의 경우 가령 농촌 유권자 수가 1명이라면 그 1명의 유권자가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유권자 1명의 의사가 곧 선거 결과가 됩니다. 즉 농촌 유권자 1명의 투표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도시 유권자 수가 3명이라면 나 이외에 다른 유권자 2명의 의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즉 투표 가치가 농촌에서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② (O) 전국 단위 정당 투표, 즉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사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는 50개 선거구에서 50명이 당선되므로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명을 뽑는 다는 말입니다(소선거구-다수대표제). 따라서 선거구 마다 최다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 ③ (X)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 활용되므로 다수당에 유리한 반면, 비례 대표제는 적은 표라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군소 정당에 유리합니다.
- ④ (X) 소수 정당에 유리한 비례 대표제를 확대할 경우 의석 획득 정당 수가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16. 그림의 (가)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ㄴ.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갑은 물론 아버님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ㄷ. 갑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ㄹ.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아버님께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6. [법과 정치 4단원]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정답] ③

[해설]

- ㄱ. (X)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와는 달리 민법상의 책임능력은 연령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책임 식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시문에서는 책임 식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인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이와 비교해서 같은 날 시행된 2018. 5. 19. 지방직 문제를 참고해주세요(B책형 기준 10번 문제). 그 문제에서는 고등학생인 갑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단서를 통해서 명확히 책임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 ㄴ. (O)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갑의 부모님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로 만약 갑이 책임 무능력자라면 갑의 부모님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하는데, 이때에도 갑에게는 책임능력 이외에 고의 및 과실 등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도 자녀가 책임능력만 없을 뿐이지 자녀의 행동이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ㄷ. (O) 갑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의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ㄹ. (X)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하지 않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한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자기 지배 원리를 구현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체제로 볼 수 있다.

- ① ㉠은 평등 선거를 의미한다.
- ② ㉡은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
- ③ ㉢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 ④ ㉣은 대의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의 자기 지배를 의미한다.

17. [법과 정치 2단원]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

[정답] ①

[해설]

- ① (X) 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은 투표 '기회'의 평등, 즉 보통 선거를 의미합니다. 평등 선거란 투표 가치의 평등, 즉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모두 동일해야함을 의미합니다.
- ② (O)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공무 담임권(=공직 취임권)이라고 합니다.
- ③ (O)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 ④ (O)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자의 통치는 국민(주권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비록 주권자는 피지배자이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자기 지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8.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를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가)** 원칙을 위반하여 **(나)** 을/를 침해한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다)** 을/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을은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못하였다. 을은 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라)** 을/를 청구하였다.

<보기>

- ㄱ. (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 ㄴ. (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를 전제로 하는 수단적, 능동적 기본권의 유형에 속한다.
- ㄷ. (다)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ㄹ. (라)의 청구는 (다)의 신청이 기각된 것을 전제로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8. [법과 정치 3단원]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정답] ①

[해설]

- 갑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를 과도하게 금지함으로써 **(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나)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다) 위헌 법률 심판** 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 재판에 전제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법원에 신청했으므로 위헌 법률 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을은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못하였다. 을은 선거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을/를 청구하였다.

↳ 재판과 관계없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며, 이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 자신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ㄱ. (O)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침해된 것인지 여부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통해 판단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기본권 침해가 되어 해당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 ㄴ. (X) 옥외 집회 금지를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기본권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 ㄷ. (O) 위헌 법률 심판 제정권은 오로지 법원이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ㄹ. (X)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입니다. 이는 위헌 법률 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됩니다. (라)는 법원의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권리 구제형)헌법 소원이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19.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원 갑은 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17세)을 추격하여 붙잡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계하였다. 병은 을을 폭행죄로 조사하고 있다.
- 정(30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되었으며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 ① 갑이 을을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②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병은 을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할 수 있다.
- ④ 정은 항소심에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 [법과 정치 5단원] 형법과 형사 소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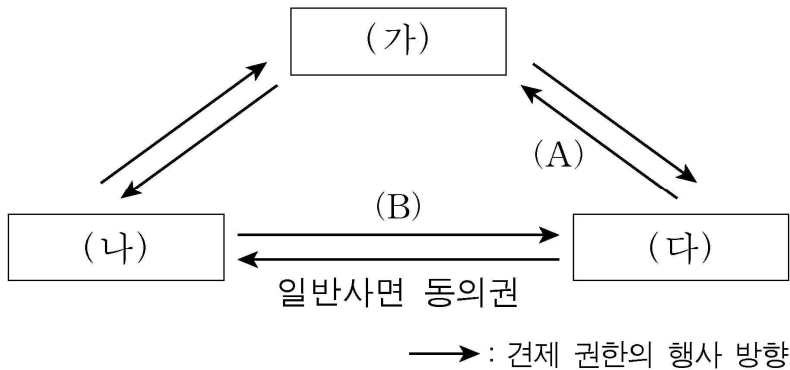
[정답] ②

[해설]

- ① (X) 회사원 갑이 도주하는 을(17세)을 붙잡은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체포행위는 수사기관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을은 현행범이므로 현행범에 대한 사인의 체포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무죄). 한편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침해는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② (O) 을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법원에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X) 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으로 보호 처분과 형벌 부과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보호 처분이 필요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혹은 형벌이 필요하여 형사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④ (X)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미 기소(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은 피고인의 지위이며 따라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수사 + 공판)	피의자 (수사 단계)	피고인 (공판 단계)	수형자 (형 집행 단계)
• 적법 절차의 원리 • 무죄 추정의 원칙 • 진술 거부권(묵비권) •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	보석 제도	가석방 제도

20. 그림은 (가)~(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국회, 대통령, 법원 중의 하나이다.)



<보기>
ㄱ. (가)는 (나)의 제소로 위한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ㄴ. (나)는 (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ㄷ. 탄핵 소추권은 (A)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B)에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20. [법과 정치 3단원] 헌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정답] ③
[해설]
(가) 법원, (나) 대통령, (다) 국회: 일반 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이 일반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대통령, (다)는 국회가 되고, 나머지 (가)는 자연스럽게 법원이 됩니다.
ㄱ.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 권한은 (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이를 심판하는 기관은 (가) 법원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입니다.
ㄴ. (O) 헌법 재판 소장은 (나) 대통령이 (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ㄷ. (O) 탄핵 소추권은 (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A)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탄핵 소추는 국회, 이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입니다.
ㄹ. (X) 조약 체결의 권한은 (나)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권은 (다)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B)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